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 월 27일 (제 297 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안연월일	2011년 1월 26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제 121 호
----------	---------

제안연월일 : 2011. 1. 26.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강력한 반대의견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의 자생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며 157만 도민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의회
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건의하기 위함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건의 의 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
김황식 국무총리님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
정의화 · 홍재형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과 국토균형발전 건설에 대한 각별한 노력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7만 충청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82년 12월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인구,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공동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담은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추진해 지방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 주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같은 용역내용을 접하면서 저희 충북도의회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2008년 정부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은 배제하고 기업 등의 분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됐으며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적 및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확대 허용 등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야기됐고 인구·경제·문화 등 사회 전부분에서 수도권 집중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先)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충청북도의회와 도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비수도권의 격양된 반응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는 얼마 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로 큰 어려움을 치렀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행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규제완화까지 진행된다면 충청도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

김황식 국무총리님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

정의화 ·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

국토해양부의 연구는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관리기조’를 유지하여 비수도권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157만 도민과 도의회 의원 모두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기조를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선(先)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일동